

“정몽준 특혜 31일 주총 막느냐, 구조조정 맞느냐”

노조, 현중 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결의대회 열어 ... 사장 면담요구 중 열두 명 경찰에 끌려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저지 구호로 서울 시내를 뒤흔들었다. 노동자들은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5월 22일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선산업 살리기 아니다, 정몽준 3대 세습 돕기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정몽준 재벌의 3대 세습을 돕는 정책이라고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30일부터 1박 2일 투쟁을 예고했다. 주총을 막지 못하면 더 긴 투쟁이 될 것이다”라며 “금속노조는 동지들의 고용과 미래를 보장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주영, 정몽준과 3대 정기



선 일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만 희생한 과거를 되새기고, 31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예고한 주주총회를 꼭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울산시민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떠들고 있다”라며 “하지만 성명서 발표 뒤에 벌인 거짓 행동을 봐야 한다. 10조원의 빚을 노동자와 사업회사 현중에 떠넘기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라고 규탄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20%를 반납하고, 오일뱅크를 상장해 함께 어려운 시기를 버티자고 얘기했다. 사측은 결국 총수 아가리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지부장은 “3월 8일 본계약은 막지 못했지만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막으면 대우조선 인수는 불가능하다. 주주총회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면담요구 중 조합원 열두 명 경찰에 끌려가

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산업은행의 막장 경영으로 부실에 몰린 대우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저지를 위해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신태호 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하면 대우조선은 제작만 하는 조선소로 전락한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뒤 배짱을 줄이고 대규모 인력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싸움은 노동자가 살기 위한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지 행진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를 포함해 조선업종노조연대 조합원들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면담요구 대열의 맨 앞에 있던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두 명을 낚아채 잡아갔다. 조합원들은 두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두 조합원의 연행을 항의하던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여덟 명과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두 명을 또 잡아갔다. 조합원들은 동지들이 끌려간 서울 시내 세 곳 경찰서로 이동해 석방 투쟁을 이어갔다.

“2019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년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결의대회 ... 현대차그룹,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여전히 무시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즉시 없애라고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순천 단조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들이 5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결정 이행 촉구, 당진·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홍승완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여전히 복리후생은 없다. 하청노동자가 다치고, 부러지고, बे이고, 꺾이는 상황도 여전하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하청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보자”라고 촉구했다.

정용재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2019년 요구안 쟁취를 결의하는 자리다. 순천과 당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총파업 투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



다”라며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에 정몽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파업 투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정몽구, 윤여철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충남과 광주전남지부의 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동 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고, 현대제철 소속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시정 촉구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병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 오전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동 투쟁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우리의 목표를 당진, 순천 공동요구안에 담아 회사에 전달했다”라며 “성과급, 일시급 동일 지급하고 복지를 동일

적용 해야 차별 철폐는 60% 정도 이뤄진다. 차별의 원흉인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이 이 요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7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1일 차별시정을 결정하고 올해 1월 22일 차별시정 권고문을 현대제철에 보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 낮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고, 의료비, 자녀교육비, 하계휴양소 이용,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성과급, 차량 지원 할인 등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장 안 차량 출입 불허와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는 현대제철에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도급비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에 차별 취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에 권고에도 시정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쓰고, 자한당 부추기면, 경찰은 노동자 수사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어 ... 노조, “더는 압수수색, 인권유린 용납 안 한다”

지난 4월 3일 국회 앞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대상이 아닌 간부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하는 등 경찰 과잉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들어 금속노조 조직부장의 집과 차량 등을 야간에 압수 수색하는 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 과잉

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수사를 “수사권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를 맞은 공안 경찰과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 항쟁 트라우마와 5.18 망언 비난 여론을 벗어나 보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도를 넘어선 과잉수사 중

단 ▲5.18 묘역 담을 뜯고 도망친 황교안과 광주민주화운동 혐오 발언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 ▲부당 외압과 성 접대 의혹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수사 등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자유한국당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에 대해 과잉수사를 벌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과잉수사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